

광주 소각장 '진통'... 구의원·주민 "절차 하자, 무효화해야"

하루 650t 처리용량의 광주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을 둘러싼 갈등과 진통이 끊이지 않고 있다.

1순위 후보지역 주민 등은 위장전입 등에 따른 절차상 하자과 회의록 일부 비공개 등을 문제 삼으며 입지 선정 전면 무효화를 요구하고 나선 반면 광주시는 "절차상, 행정상 하자는 없다"는 입장에서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진보당 소속 국강현 광산구의회원과 일부 주민들은 8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대표 선정과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고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록 전체 공개와 사과 ▲새로운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행법상 주민대표는 시설 주변 거주자 3~6명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고작 2명 뿐이고, 후보지 주변 위장전입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 소각장 연기 영향권이 최소 1km에 달함에도 주민 동의 범위를 300m로 제한해 동의서를 받은 점을 하자의 근거로 제시했다.

또 외부전문가와 주민, 의원과 공무원 등 14명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가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 선정을 직접 심의·의결해야 함에도 광주시에 권한을 위임한 점도 법적 절차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문제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대표는 최종 후보지



주민대표 선정·회의록 부분 공개·영향권 범위 제한 반발

광주시 "입지선정위 결정사항 따른 것... 위법·하자 없어"

결정 이전에 신청 지자체별로 1명씩 선정할 것이고, 회의록 부분 공개는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이라며 "선정 결과를 무효화할 중대한 하자나 위법 사항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시는 또 7~8월 중 2차 주민설명회를

열어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한 전략환경·기후변화 영향평가에 대해 공개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지난달 26일 첫 주민설명회가 주민들의 집단 반발로 무산된 상황에서 입지선정을 둘러싼 반발이 지속되고 있어 당초 오는 9

월로 예정됐던 최종 후보지 결정 고시도 일정 연기 등으로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2030년부터 시행되는 가연성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에 따라 2030년 준공 목표로 324억 원을 들여 6만6000㎡ 규모, 일일 650t 처리용량의 광역 쓰레기 소각장 건립을 추진 중이며, 관련 절차를 거쳐 지난해 12월 삼도동을 1순위 후보지로 선정했다. /오권철 기자

'마른 장마 끝, 폭염' 영산·섬진강 수온 상승 탐진·동북·주암호 일주일새 2도 수온 상승

마른 장마가 조기 종료된 광주·전남 지역에 당분간 큰 비 소식 없이 폭염이 연일 이어지면서 영산·섬진강 녹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8일 물환경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영산·섬진강 수계인 탐진·동북·주암호의 이달 첫째 주 수온이 일주일새 2도 올라 약 20도를 기록했다.

6월 넷째주 탐진·동북호는 17.7도와 18.9도를 기록했지만, 이달 첫째 주에는 19.4도, 20.5도를 기록했다. 주암호도 비슷한 기간 16.2도에서 18.6도로 올랐다.

녹조의 원인이 되는 유해남조류는 햇빛이 강한 날씨에서 수온이 20도 이상 오르거나 물이 정체될 때 빠르게 늘어난다.

특히 녹조에서 생성되는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은 발암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이 지점의 유해 남조류 세포 수는 현재 ㎥당 0개를 기록하면서 조류 경보는 발령되지 않았다. 녹조 현상도 나타나지 않았다.

조류 경보는 유해 남조류 세포 수가 관측 2차례 연속 ㎥당 1000개를 넘

어설 경우 '관심', 1만개 이상이면 '경계', 100만개를 넘으면 '대발생' 경보가 내려진다.

무더위에 녹조가 자주 끼는 영산강 승촌·죽산보도 수온이 30도 가까이 오르고 유해 남조류 수도 증가했다.

승촌보는 6월 중순 24.6도, 6월 말에는 29.4도를 기록했다. 죽산보도 같은 기간 24도에서 29.2도로 올랐다. 유해남조류 세포수도 6월 말 ㎥당 0개에서 각 144개, 148개로 증가했다.

큰 비는 물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수온을 낮추면서 녹조 현상을 해소하기도 한다. 하지만 마른 장마가 이달 초 끝나고, 당분간 큰 비 예보 소식이 없으면서 녹조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첫 폭염특보가 내려진 광주·전남 지역은 12일째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영산강유역청 관계자는 "녹조는 고온에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물이 정체돼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폭염이 이어지는 이번 주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송현근 기자

광주교육청, 진학박람회 18~19일 개최

광주교육청은 18~19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5 광주진로진학박람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는 수도권 주요 대학을 포함해 전국 148개 대학이 참여해 심층 입시정보를 제공한다. 지난해 참여 대학 130곳에서 18곳이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각 대학 입학사정관이 198개 상담부스를 운영하며 고3 학생의 대입과 고1·2 입시 대비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행사 기간에 광주진로진학지원단 소속 대입 상담교사 70명이 현장에 상주하며 고3 학생 500여 명을 대상으로 1대 1 상담을 한다.

다양한 진학 관련 특강도 운영한다.

18일에는 고3 학생을 위한 학생부종합전형 면접 대비 특강(건국대 입학사정관 이정림), 고2·3 학생을 위한 2026~2027 대입전형 특강(EBS 입시대표강사 김진석), 무전공·첨단학과·계약학과 분석 특강(경기 다산고 교사 조만기) 등을 진행했다.

19일에는 고1 학생에게 적용하는 2028 개편 달라진 대입제도 특강(광주대입지원관 조정훈), 진로 맞춤형 설명회로 예제는

계열 음악 특강(광주예술고 교사 문수영), 미술 특강(광주예술고 교사 안혜정), 체육 특강(경기 상원고 교사 노동기) 등을 마련했다.

이 밖에 서울권·광주권 공동 대입 설명회, 최근 의대 정원 문제와 맞물려 관심이 높은 의·치·약계열 설명회(경북 순심고 교사 윤종호), 고3 학생·대학입학사정관·고교 교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학생부종합전형 모의면접, 각 대학별 입시설명회도 열린다. /염선호 기자

'블랙홀 뺏다방, 골목상권 사막화' 전용 규제법 시급하다

방문판매업 영업 신고 후 사실상 변칙 매장 영업을 일삼고 있는 속칭 '뺏다방'이 골목상권을 사막화의 길로 내몰고 있지만 뺏다방 제제 수단이 없어 전용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문제의 뺏다방은 2000년대 초반에 본격 등장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공연, 건강 강좌, 사은품 증정 등을 미끼로 불러 모은 뒤 과도한 가격의 건강보조식품과 의료기기를 구매하게 만드는 방식이 주류였다.

초기에는 천막이나 임대 매장에서 단기 운영 후 뜨는 방식이었으나 최근에는 수개월 단위로 매장을 운영하며 고가의 건강식품과 생활용품 판매하는 형태로 교묘히 진화하고 있다.

8일 광주·전남지역 상인단체 등에 따르면 주로 노인층을 주요 고객으로 영업하는 뺏다방이 최근 할인 매장 간판을 내걸고 골목상권을 잠식하면서 지역 상인회와 마찰을 빚고 있다.

전남의 한 사업장은 빈 상가 건물을 임

방문판매업 영업 신고 후 사실상 매장 유도 영업

일부 영업장 80세 이하 여성만 선별 입장 시켜

광주·전남 곳곳 성행... 지역상인회와 마찰·민원 야기

대 후 지자체에는 방문판매업으로 영업 신고를 한 후 80세 이하 여성만 매장에 입장 시키는 방식으로 매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부에서 보면 마치 대형 할인 매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백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한약재부터 유정란 한판을 1000원에 판매하는 등 기발한 상술로 노인들의 지갑을 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광주를 비롯해 전남지역에서 성행하는 매장형 뺏다방은 주로 고령층 유동 인구가 많은 도심 외곽이나 중소도시 구

도심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 공통점이다.

무엇보다 외로움과 소외감에 젖어 사는 노인들에게 펼치는 따뜻한 정감 넘치는 호도마케팅은 백발백중 노인들의 과소비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 때문에 노인들의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골목상권 잠식, 가족 간 갈등을 유발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공정거래법과 방문판매법 등을 통해 일정 부분만 규제하고 있을 뿐이다.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특히 방문판매업 신고 후 사실상 매장 영업을 일삼는 행위와 특정 성별·연령대만 가려 매장에 입장시켜 영업하는 행위 등에 대한 별도 규제 조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지역 한 상인회 관계자는 "현행 방문판매법과 소비자보호법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뺏다방 전용 제재법률' 제정이 시급하다"면서 "상품 가격의 불투명성, 허위 효능 홍보, 출입제한 차별 영업 행위 등을 규제할 특별법 제정에 정치권이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처럼 진화하는 '뺏다방'의 단순한 변칙 영업 행위를 문제로 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광주 소비자단체 한 관계자는 "뺏다방 문제는 노인 인권과 지역 상권의 존립을 위협하는 구조적 범죄행위로 인식해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사후 단속이 아닌 선제적 상시 감시 체계와 공익 제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특별법이나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지역 상권을 보호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전민규 기자